

공 개



의안번호	제 34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9. 23. (제 17 차)

의
결
사
항

(충북)한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9. 23.

1. 의결주문

(충북)한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충북)한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대상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충북)한성저축은행 및 과장 ○○○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0.8.21.) 심의필

<별지>

(충북)한성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3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법적 근거

-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2
-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및 <별표9>
-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 직원에 대한 조치 : 과장 ○○○에 대하여 과징금(1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임직원)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법적 근거

-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2
-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및 <별표9>

2. 조치사유(지적사항)

가.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8.6.30. ~ 2015.4.2. 기간 중 직원 △△△ 및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34백만원* 및 약 5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의 최대 한도초과금액은 34,280,577원

** ○○○의 최대 한도초과금액은 5,040,337원

한도 초과 명세

(단위 : 백만원)

직원명	취급일	대출종류	취급액 (본건 포함 총잔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금액)	한도초과 구분	최대 한도초과금액 (최대 초과일)
△△△	2008.6.30.	손해보전대출	31 (65 ¹⁾)	50 (15)	총 임직원대출 한도초과	34 (2012.4.21.)
	2011.9.16.	일반자금대출	20 (84 ²⁾)	50 (34)	“	
소 계			51			
○○○	2011.9.16.	일반자금대출	20 (23 ³⁾)	20 (3)	일반자금대출 한도초과	5 (2016.4.21.)
	2015.4.2.	일반자금대출	5 (25 ⁴⁾)	20 (5)	“	
소 계			25			

1) 신규(사고:31,000,000원), 기존(주택:29,500,000원, 일반:4,536,505원) 등 65,036,505원

2) 신규(일반:20,000,000원), 기존(사고:31,000,000원, 주택:28,350,000원, 일반:4,769,466원) 등 84,119,466원

3) 신규(일반:20,000,000원), 기존(일반:2,980,101원) 등 22,980,101원(그밖에 주택자금대출이 5백만원 있으나 한도(5천만원) 이내로 한도초과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신규(일반:5,000,000원), 기존(일반:20,000,000원) 등 25,000,000원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舊「상호저축은행법」(2017.4.18.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 舊「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별표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9> <개정 2014.02.11. 2018.10.15.>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법인인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3)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의해 개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된 내역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에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18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 × 1단계 기본부과율 + 18억원 × 2단계 기본부과율 + 180억원 ×

	3단계 기본부과율 + 1,800억원 × 4단계 기본부과율 + (법정부과 한도액 - 2천억원) × 5단계 기본부과율
--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p>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p> <p>* 364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p>
--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 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 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종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로 의미한다.
-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 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9. 2014년 2월 14일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조정(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금액	감경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3초과 100분의 5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0

다.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시정정도 및 시정시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면기준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과징금 부과 면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감경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舊「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2.4.10. 개정된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 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기준금액	기본과징금
10억원 이하	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1조원 초과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9,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조원)×법정최고부과비율×5단계 기본부과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2,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단계)		× 7/20
5천만원 초과 2.5억원 이하 (3단계)		× 7/40
2.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단계)		× 7/80
10억원 초과 (5단계)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0.11.12>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범위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개정 2008.12.31, 2010.11.12>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0.11.12>

- (1)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개정 2008.12.31, 2010.11.12>
- (2) 위반행위가 1년이상 지속된 경우 <신설, 2010.11.12>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개정 2010.11.12>
- (4)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2010.11.12>

마.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개정 2008.12.31>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위의 6. 가. 나. 및 다.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의 50%이하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바. 상호저축은행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신설 2008.12.31, 개정 2010.11.1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정부과 한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9.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임원	별도조치 생략 1명, 조치 불능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건축 상당) 1명, 과징금 1백만원 부과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8.6.30. ~ 2015.4.2. 기간 중 직원 △△△ 및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34백만원 및 약 5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나.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9.4.29. 4개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9.11.1.)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다.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18.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98.8%로서 의무 유지비율(100%)에 1.2%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91